

# 원전내 임시보관시설, 영구저장 우려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 폐기 촉구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설계 진행 기존 원전보유 지역민 무한 희생 요구 여야 원내대표 협상 잠정합의설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 시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1986년 영광 한빛원전 한빛 1호기 첫 가동부터 6호기가 운영 중인 지난 3일까지 저장소는 80.1%(총 저장용량 9017다발, 현재 저장량 7226다발)가 채워져 있다.

저장소에 채워져 있는 것은 사용후 핵연료로 원자력 발전에 쓰이고 남은 핵연료 폐기물을 말한다. 방사선 세기가 강해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후 핵연료'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월성(204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순으로 포화상태가 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노후원전의 계속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화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의 경우 1호기와 2호기 계속운영을 위한 주민공람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계속운영이 결정되면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을 3가지로 정하고 있다. ▲임시 보관시설(원전 부지 내 신축)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이다.

문제는 중간 처분장 건설 전까지 폐연료봉 등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을 위한 '임시 저장 시설'을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원전 부지 내에 신규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세계 주요국도 완벽한 보관과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좁은 면적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핵폐기장을 영구설치에 찬성할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결국 임시보관시설이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방폐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논의돼 왔다. 2016년과 2021년에는 각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고 11차례 논의됐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다만 수차례 여야간 의견 차로 논쟁이 오간 가운데 최근 원내대표들간 협상을 통해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잠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수원은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빛원전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종합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을 공고해 업체 선정, 계약 후 80개월 이내 건식저장시설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다음달 지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원전 5·6호기 뒤편에 건설을 추진 중인 건식저장시설 건설 부지는 축구장 면적의 4배 이상 수준인 3만3000㎡(1만여평). 건축물 크기는 1만7550㎡(5300여평)에 달한다.

지난해 4월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의결해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한수원은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논의하거나 공지하지 않은 채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측은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공청회 과정이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건식저장시설 확충 설계가 들어간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단체)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보유 지역민들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을 줄속으로 거러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2029년이면 고준위 폐기물이 가득 차는 상황에서 기존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고정화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원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지난 16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 특별법 폐기를 요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부지가 결국 최종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명연장까지 추진된다면 지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할 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존 방식인 원전에 의존하고 그 위험성에 눈 감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존 원전 부지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미완의 법안을 성급하게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

는 것이 아닌,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담은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영구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영구저장시설은 수만년간 저장할 물리적 공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법안과 거래하듯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영산강유역환경청, 홍수대책상황실 본격 운영

### 10월15일까지 4단계 비상근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 ~ 10월 15일)을 맞아 본격 홍수대책상황실 운영에 나섰다.

올 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산강청은 관상·주야·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정확한 상황분석을 위해 국가하천 373지점,

1119개의 CCTV를 설치했다. 또 국가하천 승격 예정 하천(황룡강, 순천동천, 오수천) 61개 지점에는 183개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수해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각 수계, 구간별로 응급 복구 업체를 지정해 현장 복구에도 나선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

## ‘오래된 물건 자랑대회’

### 광주환경운동연합, 6월1일 개최

오래된 물건을 자랑하고 자원순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덜 사고 오래 쓰기'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오래된 물건 자랑대회'를 다음달 1일 오후 2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한다

다고 21일 밝혔다. '오래된 물건 자랑대회'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비건, 제로웨이스트, 생활화학제품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주제로 진행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수다카페·두근두근 환경 이야기' 프로그램의 5월 주제의 일환이다.

자랑대회에서는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을 공유하며 국제플라스틱 협약 등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 가장 오래된 물건을 신청한 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1만원)을 수여한다.

오래된 물건 자랑대회는 환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오래 사용하는 물건의 사진과 사용기간, 관련 사연을 온라인 신청 링크(https://forms.gle/b7ctyRLoWhxBofgd9)로 제출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남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전수 조사 첫 실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광주시 남구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남구는 40~80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가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 남구의 1인 가구는 지난 4월 기준 3만7419세대로, 전체 가구의 39%를 차지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구가 집중된 40~80

세 이하 1만5124세대다.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이용해 사회적 고립도 조사를 실시한다. 각 동의 복지동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 복지 담당자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선 조사도 병행한다.

남구는 조사 대상자가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고독사 위험군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며,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사후 관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숲 속 명품 태교여행 프로그램’ 참가하세요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20명 모집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임신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숲 속 명품 태교여행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 임신부가 포함된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2차 '숲 속 명품 태교여행 프로그램' 참가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태교 프로그램은 1박2일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광주호수생태원 태교산책, 숲에서 짙는 만삭(기넨)사진 촬영, 태명 머그컵 만들기, 임신부 명상을 한다. 2일차에는 평촌명품마을에서 태명 접시 만들기, 돌담길 태교산책, 친환경 발상체험 등 임신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기타 문의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30-2058)로 전화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남구, 장례 지원사업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광주시 남구가 광주지자체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동물화장 민원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전남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푸른솔과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남구는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일직 장소에 안치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반려

동물 장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 주민은 푸른솔 장례식장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화장비의 20%를 감면받고, 봉안당에 1년간 무료로 안치하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주민은 화장비 10%를 추가 감면받고 운구 서비스를 활용할 때 운구비용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